

정무2장관실 발족 4주년

‘여성정책 산실’ 역부족

25일로 발족 4주년을 맞은 정무 제2장관실이 “명실공히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처로 승격돼야 한다”는 의견이 강하게 일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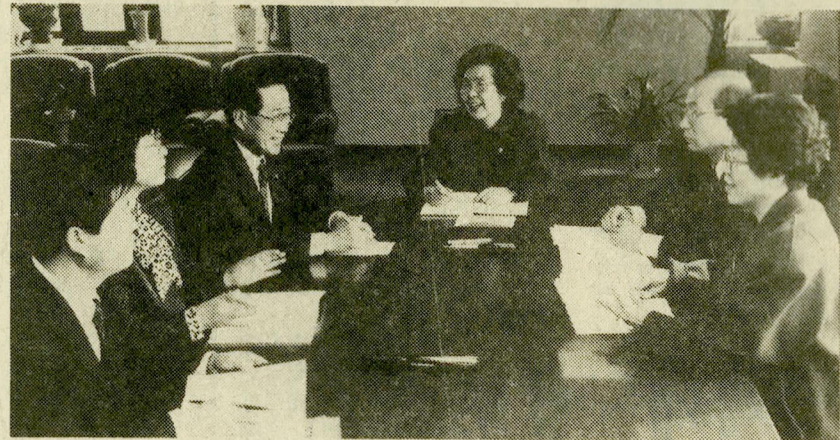
여성계는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창설된 정무 제2장관실이 △여성정책을 추진하기엔 예산이 너무 적고 △정부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의 조정기능만 갖고 있어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춘 부처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.

실제, 정무 제2장관실의 올해 예산은 16억3천2백만원으로, 우리나라 전체 예산 33조2천억원의 0.005%밖에 안된다. 이는 보통 20억~30억원이 넘는 웬만한 여성단체의 1년 예산보다도 적어 “한 나라의 여성정책을 수립·추진하기에는 턱없이 적다”는 지적이 높다. 정무 제2장관실의 업무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한 것 또한 정무 제2장관실의 위상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 이 훈령은 정무 제2장관실

에 “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통합·조정하는 역할”만을 허용하고, 실질적 집행력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다른 부처가 여성관련 업무를 시행하기 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거나, 시행하지 않을 때 협조를 구할 뿐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. 이러한 조정역할에 머무는 현실 속에도 김갑현 장관은 “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의욕을 나타내고 있고, 역대 장관들도 발로 뛰며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정무 제2장관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‘여성처’로의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사진은 김갑현 장관(오른쪽)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정무 제2장관실 핵심 인물들.

〈임완호 기자〉



예산적고 조정역 국한...승격 요구 높아 가정복지과 확대·공무원임용령 개정등 성과

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△전국 시·군·구에 가정복지과 확대설치 △시·도 가정복지국장과 시·군·구 가정복지과장에 여성을 임명

토록 해 여성공무원의 증진관리 직 진출 확대 △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성구분모집 폐지 △88년 5.5%이던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91년말 현재 10%로 확대 △세무대·경찰대·철도전문대·농협전문대의 여학생 입학제한 철폐 △국세청 세무공무원 연수 교육에 여성관련 교과목 개설 등은 비록 조정역에 의한 것이긴 하나 정무 제2장관실이 이뤄낸 ‘실적’으로 평가되고 있다.

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정무 제2장관실이 “행정·집행력이 없는

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다” “정부의 한 부처라기보다는 위원회 성격에 가깝다”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.

전국 25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“정무 제2장관실의 역할이 각 부처 업무의 조정에서 머물고, 실제 행정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, 새해에 발표하는 업무계획이 의지표명에 머무는 실정”이라고 꼬집는다. 또한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정무 제2장관실을 발족시키고도 업무를 수행할 예산 뒷받침

을 해주지 않는 것은 “정부가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 홍보만을 업무에 두고 있는 증거”라고 또 다른 관계자가 지적한다.

여성계에선 정무 제2장관실이 여성정책 전담부처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△하루빨리 ‘여성처’로 승격시키는 한편 △현재 보수 여성단체 중심의 정부활동을 재야단체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정무 제2장관실 안에서도 현재 기능직 포함 40명의 인원으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놓는다. 25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, 재야 여성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선 △현재 4명에 불과한 조정관을 5~7명으로 늘리고 △예산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.〈신연숙 기자〉